

---

---

#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10~'14년)**

---

---

2010. 5.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관 계 부 처 합 동**

# 목 차

<b>I.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개요</b>	<b>1</b>
1. 법적 근거 및 추진 경위	1
2.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추진배경	2
3. 편의증진정책 추진 여건	3
<b>II. 제2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평가</b>	<b>5</b>
<b>III.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개요</b>	<b>10</b>
1. 편의증진정책의 목표	10
2. 편의증진정책의 기본 방향	10
2-1. 이용자가 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	10
2-2. 건축물의 기본구조로서 ‘무장애’ 시설의 보편화 추진	11
3. 편의증진정책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2
<b>IV.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b>	<b>13</b>
1.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13
1-1. 공공시설의 편의증진	15
1-2. 주거환경의 편의증진	17
1-3. 교육환경의 편의증진	17
1-4. 작업환경의 편의증진	18
1-5.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증진	18
1-6. 문화시설의 편의증진	19

2. 편의증진 관련 제도·법령 개선 .....	20
2-1. 적합성 심사 강화 .....	21
2-2.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	22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	23
3. 편의증진 실용적 기술개발 및 연구 .....	25
3-1. 편의시설 표준 설계 연구 및 상세표준도 제작·배포 .....	26
3-2. 장애인 재난방지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27
3-3. RFID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	27
3-4. 건축협회의 자동체크 시스템 개발 .....	28
3-5. 이용자별 편의시설 설계지침 연구 .....	28
4. 사회인식 개선, 교육강화 및 정책홍보 실시 .....	29
4-1. 편의증진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정보 제공 .....	30
4-2.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	31
4-3.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홍보 강화 .....	32

# I .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개요

## 1

## 법적 근거 및 추진 경위

### □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적인 편의증진정책 수립·시행
-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토대로 2000년부터 5년마다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 □ 주요 추진 경위

- (2000~2004) 제1차 편의시설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2005~2009)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09.10.6~'09.12.31)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기초연구 실시(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 워크숍개최('09. 11. 10)
- ('09. 11. 11) 편의증진심의회 개최 및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 추진 실적평가
  - 제3차 5개년 계획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 실시

##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추진배경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2005~2009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 발전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3차 중장기적 편의증진정책 수립 필요
  - 제3차 계획은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 이용 편의 확충에 중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에 따라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로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추진 필요
  - 동 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의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이 편의증진법의 기준과 연계
-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지침에 의거 '08. 7월부터 공동 실시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이하 'BF 인증')」의 활성화 및 참여촉진 도모
  - BF 인증의 법적 근거가 마련('09.12월)됨
  - 현재 22건('09년말) 의 인증 취득 시설물 대부분은 자치단체 청사(주민자치센터 포함), 장애인 복지시설의 건축물이 다수임

※ 인증현황('09.12월 기준) : 구역 1곳(예비인증), 도로 1곳(예비인증), 건축물 20개(예비인증 14개, 본인증 6개)
-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08~'12)에 포함된 편의증진정책 추진
  -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07~'11) 수립·시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05.1.27. 제정)」 제6조에 따라 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제시
- 실행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계획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함

### 3

## 편의증진정책 추진 여건

- 학교, 병·의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요구 및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 편의시설 설치율과 이용자 체감율간 격차가 완화되고 비장애인의 사회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함

평가지표	2003년	2005년	2008년	2009년
편의시설 설치율 (적정설치율)	72.3%	-	77.5% (55.8%)	-
이용자 체감율	33.2%	33.6%	-	54.8%
사회인식	-	43.6%	-	45%

- 편의시설 이용자 증가 및 편의증진 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편의 증진정책 추진 필요
- 장애인 등록인구의 증가 및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 2009년 등록 장애인은 약 250만명으로 1997년 대비 약 5.7배 급증하였고, 65세 이상의 장애인도 전체의 36%임

※ 등록장애인현황 : '97. 425천명, 2005년 1,777천명, 2009년 6월 2,419천명

- 지체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뿐만 아니라 청각·시각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노인·아동 등의 이용을 고려한 보편적인 편의증진 제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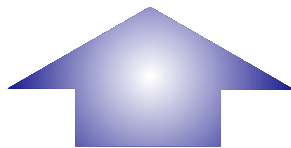
- 이용자의 편의시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적 기준 이상의 시설물 확충 필요

- BF 인증제 활성화,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 강화 등

## Ⅱ. 제2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평가

### □ 개요 및 주요 추진방향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사회 실현을 통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 ▶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 ▶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 ▶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 □ 주요 추진과제

- 장애인화장실(남·여 구분 등),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 설치를 내실화하고 수화통역·이동보조 등 인적(人的)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여
  -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接近性) 제고
- 일반국민들이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편의증진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의 관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 대국민 인식개선 및 실무자 교육



-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의원, 한의원, 이·미용원 등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느끼는 편의시설의 설치 체감도(體感度) 제고
- 정기적으로 편의증진 실태(전수, 표본)조사 및 실태 평가·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조사연구 과정에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설치 유도 및 편의증진 활성화
  - 매년 편의시설 표본 조사 및 5년 주기의 전수조사 실시
  - 장애인과 관련 전문가가 공동참여하는 실태 평가·조사연구 실시

## □ 주요 추진성과

- 편의시설의 설치 증가, 인적서비스의 제공,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 시행 등으로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음
  - '08년 공공시설 등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03년과 비교해 설치율 5.2% 증가함

(단위 : 개, %)

2003년 조사			2008년 조사			증감
법정의무 편의시설수 (a)	실제 설치수 (b)	설치율 (b/a)	법정의무 편의시설수 (A)	실제 설치수 (B)	설치율 (B/A)	
691,638	500,003	72.3	3,760,792	2,915,369	77.5	5.2

- 의원·제과점·미용원 등 대상시설 확대('05.7), 수화통역 등 인적서비스 제공('04.7), 비치용품에 보청기기 추가, 22개 건축물 등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08.7~)

※ 대면상담, 화면해설 등 대상시설의 특성에 맞는 인적서비스 제공 추진

- 생활공간의 편의시설 확충, 특히 주거·이동편의 및 교육편의 증진에 있어 획기적 발전의 토대 마련됨
  - 농어촌 장애인의 주택개조 지원(4,200가구, '06~), 임대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3,200건, '05~'08),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4,800호, '05~'09) 등 주거 안정 및 주거편의 지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07~'11)」 수립 등을 통한 저상버스 운행 등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시행으로 6천5백명의 도우미 제공('05~'09), 장애학생 지원센터 확충 등 교육편의 제공 확대
- 편의증진법, 건축법령, 특수교육 관련 법령 등의 개정과 제도 개선의 적극적 추진으로 편의시설 설치 촉진과 효과적인 편의 제공의 여건 조성
  -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유도·안내설비, 점자블록, 임신부·여성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토록 함
  - 건축법령 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05.7)하고, 건축사 시험과목에 편의증진법 등을 반영('05.7)하여 전문가의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촉진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08)를 강화하고 수집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조사원으로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 참여, 세부기준에 의한 전수 조사표 구성, 조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 조사결과를 DB로 구축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체계 마련
-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으로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보급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
  - 편의시설 상담 사례집('06),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매뉴얼('0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편('07), 공공업무 시설의 편의시설 매뉴얼('08) 등 제작·배포

## □ 문제점

- 편의시설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제2차 계획기간의 목표 설치율 85%에 미치지 못하는 77.5%로 나타났으며,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도 55.8%로 낮게 나타남
-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하는 심사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실시된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및 후속조치 계획 미흡,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와 재정적 지원방안 부재로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추진실적의 효과를 약화시킴
- 편의시설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편의시설은 적게 설치하고 그 효과는 큰 대체 편의시설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등 지원 필요

-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이용한 홍보를 주로 실시함
  - 보편적 설계와 고령화 사회 등 다양한 요소와 개념을 연계한 홍보 및 학령기부터 편의시설과 편의증진에 대한 교육 필요

### Ⅲ.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개요

#### 1

#### 편의증진정책의 목표

- 편의시설 설치율을 '14년까지 88%('08년 77.5% 대비 10.5%증),  
적정설치율은 70%('08년 55.8% 대비 14.2% 증)까지 높임

※ 다만, 정부기관은 '14년도 95%까지 설치 추진

	'03년도 전수조사	증가	'08년도 전수조사	증가	'14년도 (목표)
설치율	72.3%	5.2%	77.5%	10.5% ( <small>'03~'08증가분의 약2배</small> )	88%
적정설치율	-	-	55.8%	14.2% ( <small>'03~'08증가분의 약3배</small> )	70%

#### 2

#### 편의증진정책의 기본 방향

##### 2-1. 이용자가 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신체적 조건이 시설물 이용에 불리  
하지 않도록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적정성 확보
  - 편의시설은 설치되었으나 대상시설중 40%이상의 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 표준마련 및 업무 전문성 강화

- 지체 및 시각장애인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로 노인·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강화

---

## 2-2. 건축물의 기본구조로서 ‘무장애’ 시설의 보편화 추진

---

-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의 건축물 보편화 추진
  - 건물 이용을 돕기 위한 부수적인 설비 또는 장애인만을 위한 추가적인 편의시설이라는 인식탈피 필요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디자인적 특징을 고려한 편의시설 표준상세도와 설계지침 마련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법제화에 따른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장에 맞는 편의증진 환경조성
    - 2000년 제작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의거 지자체·장애인단체 등에서 편의시설 매뉴얼 제작·배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시설 체감도를 높이도록 신기술과 결합된 편의시설 개발 및 설치 촉진

## 비전

편의증진으로 통합적 사회환경실현

추진  
목표

편의시설 설치율 88%, 적정설치율 70%

- 공공기관 설치율 95%, 적정설치율 85%

추진  
방향

-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
- “무장애” 건축물의 보편화 추구

## 편의확충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제도 및  
법령 개선기술개발  
및 연구인식개선  
및 정책홍보추진  
과제

• 공공시설의 편의 증진

• 주거환경의 편의 증진

• 교육환경의 편의 증진

• 작업환경의 편의 증진

•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증진

• 문화시설의 편의 증진

• 적합성심사 강화

•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 BF인증제도 활성화

• 상세표준도 제작 및 배포

• 장애인 재난방지 시스템 개발

• RFID적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 편의시설 자동체크 시스템 개발

• 이용자별 편의시설 설계지침 연구

• 편의증진관련 종합정보 제공

• 인식개선 강화

• 정책홍보 실시

## Ⅳ.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 1

###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 '0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03년 72.3% 대비 5.2% 향상되었으나 적정설치율은 55.8%로 낮아, 편의시설 확충 특히 적정설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용도별 설치율('08년 전수조사)

- 분야별 설치율 (공공업무, 주거환경, 교육환경, 작업환경, 생활시설, 문화시설)

건물군	건물유형	대상 건물수	대상 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	적정 설치율(%)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용원	9,059	163,062	129,813	84,691	79.6	51.9
	일반음식점	7,584	136,512	108,431	2,275	79.4	52.9
	일반목욕장	1,025	18,450	14,285	9,453	77.4	51.2
	읍·면·동사무소	8,367	451,818	350,270	259,149	77.5	57.4
	의원,한의원등	1,643	82,150	62,131	46,966	75.6	57.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3,642	83,766	65,932	46,044	78.7	55.0
	공연장,관람장	378	19,656	16,801	12,794	85.5	65.1
	집회장	336	16,750	12,676	9,169	75.7	54.7
	전시장등	328	16,966	13,270	9,753	78.2	57.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6,193	309,561	240,599	172,496	77.7	55.7
	특수학교	87	5,508	4,510	3,374	81.9	61.3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청사)	1,870	115,940	97,200	69,796	83.8	60.2
	금융업소,사무소등	5,642	282,100	214,540	161,476	76.1	57.2
공동주택	아파트	8,053	281,785	246,050	188,629	87.3	66.9
	연립주택	2,183	39,276	29,651	18,831	75.5	47.9
	다세대주택	12,593	226,606	180,924	115,970	79.8	51.2



- 제2차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계승하여 안내·수화통역 서비스 외 시설 용도와 서비스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적서비스 제공 및 비치용품 확대 지속 추진

- 화상전화기, 전시내용의 음성 또는 문자 안내기기 비치, 수화통역·낭독서비스 등 인적서비스 제공

※ 비치용품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및 설치율('08년 전수조사)

대 상 시 설		비치의무용품	구비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울이상의 확대경, 공중모 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50.5%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울이상의 확대경, 공중모 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44.9%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7.2%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7.7%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24.5%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울 이상 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44.9%

## □ 추진 방향

### ◇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향상

- 적정설치 심사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인적서비스 확충

### ◇ 생활전반의 분야별(주거·교육·작업·생활·문화시설) 편의증진 강화

- 편의시설 개선, 인적서비스 강화, 비치용품 확충

## 1-1. 공공시설의 편의증진

-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향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대상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단계별 설치계획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청사(소속기관 포함)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4년 95%(적정설치율 85%)까지 향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기업 등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4년 90%(적정설치율 80%)까지 향상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청사(소속기관 포함)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대국민 공개 실시

기간	중점 관리대상		'14목표 설치율 ('08설치율)	'14목표 적정설치율 ('08설치율)
'10년	업무시설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청사 ○ 광역·기초 지자체 청사	95% (83.8%)	85% (60.2%)
	소관시설	○ 학교 ('10년 실태조사)	90% (77.7%)	80% (55.7%)
'11년	소관시설	○ 국립 문화 및 체육시설 ○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11년 실태조사)	90% (83.3%)	80% (61.0%)
'12년	업무시설	○ 주민자치센터 ○ 파출소	95% (77.5%)	85% (57.4%)
	소관시설	○ 공공도서관 ('12년 실태조사)	90% (82.7%)	80% (62.3%)
'13년	'13년 전수조사			
'14년	소관시설	○ 사회복지시설 ('14년 실태조사) ○ 공단 등 공기업(지방 포함) ○ 국립공원	90% (79.2%)	80% (60.0%)

※ '10년 실태조사는 복지부(학교)와 국토부(학교주변 도로) 공동 추진하고, 개선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에 협조 요청

- 추진방안

기관	'10	'11	'12	'13	'14
해당기관별	확충계획수립	현황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조치 지속추진 →			
보건복지부	학교 실태조사	국공립병원 실태조사	공공도서관 실태조사	전수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 대상 공공시설별 비치용품 정비 및 구비

- 대상시설에 비치용품 구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편의시설 전수조사시 비치용품 구비실태를 조사하여 구비현황 파악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비치용품 구비율을 2014년 100%까지 향상  
(단위:%)

구 분	'08 전수조사	'10	'11	'12	'13	'14
○ 국가·지자체청사,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44.9	60	70	80	90	100
○ 공연장, 공공도서관 등	7.7	30	40	50	60	70

○ 공공시설의 인적서비스 및 통신중계서비스 운영방안 마련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별로 수화통역사 등의 인적서비스 및 통신중계서비스(TRS)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2014년 100%의 공공청사에 인적서비스 또는 통신중계서비스 실시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 민원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이 가능토록 함

(단위:%)

구 분	'10	'11	'12	'13	'14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인적서비스 및 통신중계서비스 (TRS) 실시율	20	40	60	80	100

## 1-2. 주거환경의 편의증진

### ○ 장애인·고령자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 -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속 추진

- '06년부터 매년 농어촌의 장애인 거주주택 1,000가구 개조 지원 ('06~'09년 총77억원, 4,293가구 → '10~'14년 총95억원, 5,000가구)

#### - 국민임대 주택내 편의시설 무료설치계속 지원(국토해양부)

- 장애인·고령자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제거 등 장애인 신체구조에 맞게 편의시설 무료설치

※ 분양·임대주택을 매년 일정비율 특별·우선공급하고 고령자용 국민임대 공급 시범사업 확대 ('09년 1,000 → '10년 1,500호)

#### - 장애유형 및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최저주거 기준 마련 연구 용역 실시 중('09.8 ~ '10.8, 국토해양부)

구 분	'10	'11	'12	'13	'14
○ 공급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편의시설 설치 지속추진 →				
○ 최저주거기준 마련	연구용역추진	관계법령 제정여부 따라 최저주거기준 공고			
○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추진				
○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입법여건조성	제정추진			

## 1-3. 교육환경의 편의증진

### ○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지속적 실시

-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별 초·중·고 편의 시설 설치 현황조사 매년 실시('10~'14)

-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기준(매뉴얼) 마련('12)
- 교육시설별·장애유형별 인적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 초·중·고 재학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사업 및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매년 지속적 추진 ('10~'14년간 총185억원 지원)

#### 1-4. 작업환경의 편의증진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무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 점검 및 지원 확대(노동부)
  -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정기점검('10~'14)
    - 편의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심사에 반영하고 관리가 부실한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
  - 작업환경 개선 관련 편의시설(권장사항 포함) 설치 지원 확대('10~'14)
    -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무상지원 추진

(단위: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13.4	25	25	25	25

#### 1-5.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증진

-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 이용 가능한 출입구(문) 설치개선 ('12~'14)
  - 장애인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 등에 의한 지역사회 운동을 활성화 하여 경사로, 출입문 개조, 핸드레일 등의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시설주의 설치를 유도

- 시설주 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설치 방법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지방자치단체별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사업 권장

※ 구로구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설치사업 현황

구 분	'07	'08	'09
○ 편의시설 설치 근린생활시설수(개소)	2	6	14
○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설치 지원 예산(백만원)	2.2	24.3	25.6

○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및 출입구(문) 법적 의무화의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13) 및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의무화 추진('14)

※ 단, 공간 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완화신청을 통해 불합리한 강제성 배제

## 1-6. 문화시설의 편의증진

○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09년 편의시설 지원 (11개소, 4억원) → '10~'14 지원(총25억원)

(단위: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 편의시설 설치지원	5	5	5	5	5

○ 데이지(디지털녹음도서), 점자악보,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지식 정보 격차해소에 기여

- '03~'09년까지 (5,466종 1,896,561면) → '10~'14까지 지원(총20,000종 83억원)

(단위: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 대체자료 제작종수	2,000종	3,000종	4,000종	5,000종	6,000종
○ 대체자료 개발·제작예산	7.47	13	17	21	25

##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건축법에, 장애인 등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보충적 시설로써의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 규정의 실효성 약화
  - '98년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높이차이 없는 주출입구' 설치 등 시설물 기본구조에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음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현황 : '08년 71.7%('03년은 74.2%), 적정율 43.9%
  - 또한 '08년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신축건물의 설치율은 77.6%로 기존건물의 설치율 77.5%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시설 계획단계부터 효과적인 '적합성 심사' 실시 필요
-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의 개선이 요구됨
  - 작은 규모의 시설임에도 편의증진법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편입되어 시설의 개선이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반면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생활권 내 시설용도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의 불편이 예상됨
  - 시·청각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

※ 유도·안내시설 설치 현황(2008년 전수조사 결과) :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 24.8%, 점자블럭 50.6%, 촉지도·음성안내시설 24.8%

※ 비치용품 설치 현황(2008년 전수조사 결과) : 읍·면·동사무소 50.5%, 우체국·전신전화국 44.9%, 공공도서관 7.2%, 공연장·관람장 7.7%, 도서관 24.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44.9%

○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09년말까지 총 22건 인증

-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등 대책마련 필요

※ 인증현황(총22건) : 구역 1곳(예비), 도로 1곳(예비), 건축물 20개(예비 14개, 본인증 6개)

## □ 추진 방향

◇ 적합성심사 강화

◇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2-1. 적합성심사 강화

○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의 건축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 편의증진법 개정 추진중(편의증진법 제9조의 2 신설)

※ 편의증진법 제9조의 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그 밖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대상시설의 법적 편의시설 기준 적합여부의 검토가 가능한 툴을 개발(BIM기술 적용)하여 적합성심사 효율성 제고

## 2-2.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 일부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면적기준을 축소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 추진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개정('11)
    - 이용원 · 미용원,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소, 금융업소 · 사무소 등 (기준기준 500m<sup>2</sup> → 300~400m<sup>2</sup>)
-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 이용 동선 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도 · 안내설비 세부기준 개선 추진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개정('11)
    - 유도·안내설비 및 경보·피난설비 의무대상시설 확대 (기준 36종 건물용도 중 5개 시설 의무 → 전시장·숙박시설 등 의무대상시설 확대)
    - 운동시설의 위생시설 설치 등의 세부기준 강화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비치용품 추가 및 적용확대 추진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11)
    - 의료시설 및 금융시설에 화상전화기 비치, 학교 및 의료시설에 보청기기 비치 등 비치용품 및 적용대상시설 확대

##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 ○ 인증 취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및 제공

-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 추진

#### ※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례

##### ▶ 서울특별시

- 친환경 건축기준(2007.08.16 예규 제705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인증비용 일부 지원 및 표지 부착 등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2008.9.30 조례 제4684호),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가능

##### ▶ 인천광역시

-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2009.11.09 조례 제4349호), 공공건축물 건설 추진시 친환경에너지 설계 요소 적용 및 친환경·에너지건축물의 인증대행 및 수수료 등을 사업 예산에 반영

### ○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인증제 참여 유도 및 홍보 강화

- 공공시설의 BF인증 취득 독려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소관 공공시설의 인증참여 독려

(단위 : 개소수)

구 분	'10	'11	'12	'13	'14
○ 청사 및 소관공공기관의 인증취득 시설수	20	25	30	35	40

- BF공모전 개최하고 수상작 전시회를 추진하여 인증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증진을 통해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10~'14)
- '10년 제1회 BF공모전 추진

- 향후 BF공모전의 분야를 도시디자인 부문까지 확대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BF아이디어 공모전 추가 개최 추진 ('11~'14)
- 홍보 강화
  - 지속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인증에 대한 관심 제고
  -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시설에 대한 지속적 홍보 (인터넷 배너 광고, 건축관련 협회지 및 신문 지면광고, 브로슈어 제작·배포)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 편의증진법 제정시 마련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건축적 변화와 이용자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의 적정설치 유도 곤란
  - 2000년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제작 이후 편의시설 설계표준 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 ※ 지자체·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2000년 제작)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용(2006)·공공업무시설용(2008) 매뉴얼 제작·배포
  - 대부분 사회 물리적 환경이 비장애인, 성인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의 시설이용 편의증대를 위한 다양한 상황의 설치기준 제시가 요구됨
    - ※ 노인 및 아동관련 해외 연구자료
      - 일본 : 노인관련 각종 설치기준 자료(바리어프리-住宅讀本) 등
      - 독일 : 장애아동관련 치수에 대한 설치기준 자료(Prof.Dr.-Ing, Gerhard Loeschcke, Wohnumwelt behinderter kinder, Darmstadt, VERLAG DAS BEISPIEL, 1993)
- 시설물 이용상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IT 등 첨단 기술의 편의시설 적용 필요
  -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단속업무 효율화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RFID기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구축' 추진중
  - 장애인 등의 피난예측시스템 등 핵심 분야 정보화가 미비하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요구됨

## □ 추진방향

- ◇ 편의시설의 적정화보편화를 위한 표준설계 연구
- ◇ 장애인 피난설비 관련 재난방지시스템 개발 지원
- ◇ 업무담당자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이용자별 편의시설 설계지침 연구

### 3-1. 편의시설 표준 설계 연구 및 상세표준도 제작·배포

-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편리한 무장애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설계안 마련
  - 편의시설 표준 설계도서를 마련하여 지도·감독의 통일성 확보 및 법적 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 유도(‘13)
  - 대상시설별 · 편의시설별 · 공사유형별 표준 설계도서 제작
  - 건축물 이용자의 유형별 행태 및 공원 ·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의 용도별 특징 분석을 통한 개발
  - 상세표준도 영상자료 제작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상세표준도 및 영상자료 제작 후 편의증진 종합정보홈페이지를 통해 건축관련 전문가 및 국민에게 공개하여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3-2. 장애인 재난방지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해 장애인 유형별 대응지원이 가능한 재난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12)

편의증진법, 건축법, 소방법 등에 따른 건축물 데이터 및 장애인과 노약자 유형별 특징 데이터 구성



장애인과 노약자 유형별 행태적 특징에 따른 동선 및 건축물 범위와 대지형태 선정 후 시나리오 작성



각 장애인 및 노약자 유형별 피난 동선에 따른 시뮬레이션 제작



시뮬레이션에 따른 매뉴얼 제작

### 3-3. RFID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 불법주차 단속업무 효율화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RFID

- 실시간 위치추적 기술(RFID)은 최근 RFID 태그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담고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자유롭게 송수신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시스템 시범구축
- LED전광판 등 주차안내 서비스 및 RFID리더/안테나, 차량감지 센서 등 시스템 구축 ('10)
- 시범사업수행 후 이용자 만족도 및 주차위반건수 감소 등의 사업 효율성 평가·분석('11)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국적 확대 실시('12~'14)

### 3-4. 편의시설 적합성 자동체크 시스템 개발

- BIM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시설의 법적 편의시설 기준 적합여부 검토가 가능한 툴을 개발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용 프로그램

- 건축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2D의 CAD시스템과 다르게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 기법을 이용 건물의 3차원 형상 표현 가능
- 점진적인 시스템구축으로 비전문가 및 전문가가 사용가능하도록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 BIM 적용 가능한 건축물의 법적 기준의 검토 시스템 개발('11)
  - BIM 모델링 지침을 개발하여 대상시설별 관련한 모든 법적기준의 검토시스템 개발 및 보완('12)
  - 테스트 베드 및 실용화 구현 및 온라인 매뉴얼 작성('12)

### 3-5. 이용자별 편의시설 설계지침 연구

- 이용자별 행동 특성을 감안한 편의시설 설계지침(가이드라인) 연구
  - 다양한 지체장애인(휠체어사용자, 뇌병변장애, 목발사용자 등)의 시설종류별 이용 패턴 특성을 고려한 설치기준 연구('12)
  - 시각장애인의 시설물 이용특성을 고려한 설치표준안 연구('13)
  - 아동 신체치수 및 노인의 행태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이용 편의시설 설치기준 연구('14)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과 편의시설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차별금지, 편의시설 공유 방법 등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개선 필요
  -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장애인 제외)수준은 '09년 45%로서 '05년 43.6% 보다 1.4% 상승하였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
  - 대중매체를 통한 편의시설 및 관련 정책의 홍보는 현재 전무하며, 편의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공식 웹페이지도 없음
- 편의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건축 전문가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설치방법에 관한 많은 질의와 민원을 유발하고 있음
  - 공무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06년부터 '09년까지 733명의 공무원이 동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건축사 등 전문가 교육 실적은 없음

※ 공무원 편의증진 전문교육 수료 공무원 현황 (단위:명)

년도	계	'06	'07	'08	'09
계	733	104	196	228	205

※ 공무원 대상 편의시설 교육 전·후 인식변화

- 편의시설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결과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교육전 19%에서 교육후 89%로 개선(2009년 기준)



## □ 추진 방향

- ◇ 편의증진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정보 제공
- ◇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개선교육 강화
- ◇ 대중매체 등을 통한 편의증진 정책 홍보

### 4-1. 편의증진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 정보제공

- 장애인 편의증진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추진 ('12)
- 전국 대상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장애인의 외출 및 이동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편의시설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 운영('13)
  - 장애인 등이 외출시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정보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이동 및 접근에 관한 정보제공
    - ※ 국토해양부에서 구축·운영중인 대중교통정보시스템(TAGO)과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
  -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구축(관광특구 또는 도심 등) 운영
  - 1차적으로 웹을 기반으로 하며, 향후 스마트폰 서비스 확장 고려
    - ※ '08년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 구축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DB 활용
- 편의시설 국내외 현황 및 자료 제공, 상시 사이버 교육 실시 등 다목적 사이트로 운영('13)
  - 편의시설 표준 설계도서(상세표준도)를 제작·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
  -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통계자료 게시
  - 편의증진정책 등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국내외 자료 제공
  - 편의증진 인식개선을 위한 사이버 교육 수강

## 4-2.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기술지도 전문가에 대한 교육 확대 실시
  -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교육참여를 통한 업무수행능력 강화
  - 편의증진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교육 참가 독려
  - 편의시설 지도요원의 현장지도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연2회)
  - 건축전문가 교육 추진
    - 건축사의 보수교육시에 편의증진교육 프로그램을 반영('12)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교육에 편의증진교육 반영('10~'14)
- 편의증진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체험프로그램 홍보 및 활용
  -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추진
    - 복지관, 장애인협회 등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이 '09년 현재 전국 25개소임 → '14년 40개소 확대

구 분	'10	'11	'12	'13	'14
○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개소수)	28	31	34	37	40

※ 전국 편의시설체험전시장('09년)

권역	기관명
서울특별시	국립재활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상세정보를 편의증진종합정보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온라인예약 할 수 있도록 함('13)

- 전국적으로 분산 실시되고 있는 장애체험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연계하여 체험교육을 요청하는 인근 학교·기업·공공기관 등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13~'14)
- 장애체험프로그램 수료자수 증가 ('09년 국립재활원 교육수료자수 4,902명 → '14년 전국 체험프로그램 수료자 60,000명)

(단위:명)

구 분	'10	'11	'12	'13	'14
○ 전국 장애체험프로그램 수료자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 4-3. 편의증진 정책홍보 강화

- '편의시설의 이해' 영상물 제작·보급 및 활용('12)
  - '편의시설의 이해'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중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버스정류장 등의 교통시설 및 공공시설에 상영
  - 초·중·고등학생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
  - '편의증진 정책'관련 범국민 대상 공익광고 제작·보급('13)
  - 홍보용 영상물을 공무원교육 및 건축전문가 교육에 활용
- 편의증진에 관한 공모전 개최('10~'14)
  -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편의증진에 관한 UCC공모전 개최를 통해 인식개선 강화

## <추진과제별 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목 표
1-1 공공시설의 편의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계별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10~'14)</li> <li>-비치용품 구비계획 수립 및 비치</li> <li>-인적서비스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제고:60.2%('08)→85%('14)</li> <li>-공공시설의 비치용품 구비율 제고:44.9%('08)→80%('14)</li> <li>-공공시설의 인적서비스 실시율 제고:40%('14)</li> <li>-공공시설의 통신중계서비스(TRS) 실시율 제고:60%('14)</li> </ul>
1-2 주거환경의 편의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속추진</li> <li>-국민임대주택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li> <li>-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연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장애인주택 개조(매년1,000가구)</li> <li>-안전손잡이 설치, 문턱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통한 주거편의성 제고</li> <li>-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연구를 토대로 주거지원법 제정</li> </ul>
1-3 교육환경의 편의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li> <li>-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대학 장애학생도우미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편의시설 현황조사 실시 및 매뉴얼 마련('12)</li> <li>-교육시설별·장애유형별 인적서비스 제공 확대</li> </ul>
1-4 작업환경의 편의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등의 편의시설 정기점검</li> <li>-작업환경의 편의시설 설치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고용사업체 편의시설 설치 무상지원 확대:25백만원('14)</li> <li>-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생활증진 실현</li> </ul>
1-5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생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법적의무화 근거마련 연구 실시</li> <li>-지방자치단체별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사업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생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연구('13)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한 시설접근성 개선('14)</li> <li>-지방자치단체의 개선사업을 통한 시설개선('10~'14)</li> </ul>
1-6 문화시설의 편의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li> <li>-점자도서, 녹음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시설 설치지원:11개소('09)→14개소('14)</li> <li>-점자도서 등 지원:71종('09)→2,400종('14)</li> </ul>
2-1 적합성심사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시설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적합성심사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증진법 개정('10)</li> </ul>
2-2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기준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1)</li> </ul>
2-3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 취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li> <li>-인증 세미나 및 인증 홍보 강화</li> <li>-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추진을 통한 인증제 활성화</li> <li>-편의증진 공모전 대상 및 분야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취득 공공시설 증가:40개소('14)</li> <li>-BF인증관련 세미나 및 교육 매년 실시</li> <li>-BF공모전 실시 및 수상작 전시회 개최('10~'14)</li> </ul>
3-1 상세표준도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설계도서 활용을 통한 지도·감독의 통일성 확보</li> <li>-법적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세표준도 제작·배포('12)</li> <li>-상세표준도 영상자료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개발('12)</li> </ul>

추진과제	세부계획	목 표
3-2 장애인 재난방지 시뮬레이션시스템 개발	-피난예측 건축계획 유도에 따른 장애인 등 시설이용 약자의 안전성 확보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장애인 유형별 대응지원을 위한 장애인 재난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 12)
3-3 RFID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RFID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주차 단속업무 효율화 및 장애인편의증진 향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RFID관리시스템 구축(' 12) -시범구축 후 사업 효율성 평가분석
3-4 편의시설 적합성 자동체크 시스템 개발	-편의증진법 관련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장애인행동특성을 고려한 장애물없는 건축물 설계를 통해 장애인 이용편의성 증대	-BIM 기술을 적용한 건축물 법적기준 검토 시스템 개발(' 12) -실용화 구현 및 온라인 매뉴얼 작성(' 12)
3-5 이용자별 편의시설 설계지침 연구	-다양한 시설이용자의 행태특성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설치기준 제시를 통해 시설물 설치의 다양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다양한 이용자 편의제공 기초자료에 의해 시설물 설계기준의 합리성 증대	-다양한 지체장애인의 시설종류별 이용 패턴 특성을 고려한 설치기준 연구(' 12) -시각장애인의 시설물 이용특성 및 시설 환경간의 관계 고려한 설치표준안 연구(' 12) -아동 신체치수 및 노인 행태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이용 편의시설 설치기준 연구(' 13)
4-1 편의증진 홈페이지 를 통한 종합정보제공	-장애인의 편의증진 관련 정보검색 용이성 향상 -웹지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참여 기반 마련 -비장애인 이용자의 편의증진 관련 인식개선	-편의증진 종합정보 홈페이지 구축(' 12) -편의시설 웹지도시스템 구축(' 13) -국내외 자료제공 및 사이버교육 실시
4-2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담당공무원의 편의증진 교육 강화 -건축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추진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장애체험프로그램 홍보 및 활용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강화 -장애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편의증진 인식개선 증대 -건축전문가의 편의시설 이해도 향상을 통한 편의시설 적정설치를 제고에 기여 -장애체험 수료자 수 증가:60,000명(' 14)
4-3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홍보 강화	-편의증진 영상물 제작보급(학교·기업) -정책관련 공익광고 제작·보급 -장애인편의증진 UCC공모전 개최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 확산 -비장애인의 장애인 및 편의시설에 관한 인식개선에 기여